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백승중  
한국기독교교육대학교 대우교수

피해한 농촌과 공통처럼 몸집이 커진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로컬 푸드 운동이다. 이것은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식품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이 생산지로부터 50km 이내에 있을 경우를 로컬 푸드라고 한다. 광활한 미국 땅에서는 운송시간이 24시간 이내일 때로 정의했다. 일본에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라 하여,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곳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일컫는다.

2008년부터 이 운동은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산물을 가까운 도시의 직거래장터로 가져간다.

로컬 푸드 운동, 사회정의의 틀 이끈다

상품 진열도, 가격 책정도 스스로 한다. 포장이나 운반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재고 물량도 남보다 스스로 거둬간다. 자신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거나 품질과 규격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를 처벌한다. 현재 여러 도시에서 이런 방식의 직거래가 이뤄진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단계는 7개나 된다. 그것을 단 한 개로 줄인 것이 로컬 푸드 장터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직거래가 정착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농산물 시장이 소농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기업농 또는 대농들은 여러 가지 유통경로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농민의 대다수인 소농들의 처지와는 사뭇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농들은 결국 시장에서 소외되었다. 농촌사회를 농가 부채와 고령화의 수렁에

빠뜨린 주범은 바로 시장의 논리였다. 경제논리만 따지는 사람들은 농촌을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유물로 취급한다. 진실은 어떠한가. 농촌은 한국인 전체의 고향이자 아직도 전통문화가 숨 쉬는 공간이다. 농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 것은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였다. 그와 관련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도 한 몫 하였다.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들 말하는 쌀 가격조차 시장에서는 널뛰듯 한다.

20kg 한 포대에 6만4000원 하는 쌀값이, 특하면 특가라며 4만5000원에 거래된다. 요즘치는 가격은 소비자들의 요령심리를 부추긴다. 농민에게는 이것이 경제적 희생의 강요로 나타난다. 적정가격도, 생산단가도 없는 것이 농산물이다. 한국사회의 눈부신 경제개발을 이뤘다는 20세기 후반에도 농촌의 비극은 심화되었다. 농촌에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 노령화 지수가 도시보다 갑절이나 높을 이유가 없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추락하고 만 것도 농촌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부족한 농산

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현재로서는 식량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상태는 과연 무한정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 틀을 노리고 국내외의 중간상인들이 마구 끼어들어 돈벌이에 열중한다. 죽어나는 것은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인 우리네 시민이다.

오늘날의 시장은 불의하다. 소비자의 가격 부담은 줄어드는 일이 없는 반면,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은 최소 생계비도 못된다. 브라질의 바나나 농장에 고용된 농민들은 소비자 가격의 3% 미만을 나눠가진다. 이 관국에 비교우위를 들먹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단시간 내에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고, 식량 자급의 과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불가능한 과제라고는 볼 수 없다. 세계 굶지의 산업 국가들도 식량 자급률이 100% 이상이다.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

로컬 푸드 운동의 시작은 소농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건강을 약속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식량 자급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제교역에도 자극을 주어, 해외의 농민들도 자급자족적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열망에 불타게 만들 것이다.

의료칼럼



송창훈  
조선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두 편의 흡연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할 바 있다.

하나는 흡연자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의 추적 관찰에 의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의 피해와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후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 높았으며,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의 3.7%였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19년간의 추적 관찰

흡연으로 인한 피해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에 의해 흡연과 사망과의 상관 관계를 밝힌 연구였다. 연구결과 남성 흡연자의 사망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1.75배 높았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5명 중 1명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이었으며, 특히 30세 이상의 남성 사망의 경우 34.7%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해마다 커짐은 물론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과 여성들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흡연이 주는 치명적인 피해사례로 담배회사와의 소송이 시작됐고,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 입증인데,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매년 1조7000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산출한 것은,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암과 흡연과의 인과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일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장기간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메디케이드)과 캐나다 는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주(州)정부가 나섰지만, 우리는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용이 지출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것이다.

담배소송은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도 소송에 나선다면 근거법 없이 소송에 나서서 승소한 미국 방식, 아니면 근거법을 만든 후 소송에 나선 캐나다 방식 중 선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최초 큰 빅데이터에 의한 흡연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건강보험 제정의 선량한 관리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연 관련법 제정과 금연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들의 권리보다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제정된 금연관련법에 대한 범칙금이나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담배갑의 표지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이나 문구, 담배갑의 색상 등에 이르기까지 금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의 지출을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성년자 등의 담배사용 규제 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의 예산집행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고



권병주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홍부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뒤편 뒤편 해도 홍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얻어 키운 박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대목이다.

박근대대통령도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유의 화법으로 ‘통일은 대박이다’고 해서 연일 화제를 몰고 와 대박을 터뜨렸다. 박대통령의 평소 언행으로 보면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지만 통일일려 증을 한 방에 날려 버린 느낌이다. 통일에 대한 메시지는 100% 공감이다.

네이버의 힘을 빌리면 ‘대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선거는 ‘대박’이다

다. 통일은 한 민족의 열원이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국민의 통일의지가 하나 될 때 대박은 가능하다.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박근대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 선거는 대박일까? 단언컨대 선거는 대박이다. 선거철만 되면 연방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다가도 당선된 후에는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정치인, 그럴 듯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여 당선된 후 당리당락 등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한테 한 약속을 파기한 정치인, 공무원 쯤 세우기·쫄서기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정치인, 인사권과 추진사업을 이용해 뒷돈 받은 정치인, 잘못된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여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정치인 등은 모두 유권자를 우습게 본 것이므로 이들을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은 ‘중박’이다.

현대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민주주의의 운유처럼 되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가 민주적이 되려면 인권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민의 의지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진정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선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순 없지만 선거 없이 민주주의를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다. 인간의 존엄성 실현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깨끗하고 올바른 진정한 선거는 ‘대박’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거와 정치사는 대박·중박은 고사하고 쪽박에 가까웠다. 선거무용론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선거를 필두로 한 관권선거,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돈 선거 등 불리는 금품·향응선거, 흑색선전과 상대방 횡령기, 혈연과 학연, 지연에 얽매인 연고주의선거를 당선도구로 삼은 정치인들은 선거문화를 ‘쪽박’으로 몰고 간 주모자들이었다. 또한, 공짜술·공짜밥·공짜 돈과 표를 바꾸고, 혈연·학연·지연에 얽매어 서표를 주고, 정치라는 말만 나와도 외면해버리고, 정치불신으로 선거에 무관심하고 기

권해버린 유권자들은 공모자들이었다.

올해 6월 4일에 있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6.4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5년 농·수·축협 등 동시조합장선거,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지방선거, 조합장선거,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져 매년 전국적인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6.4지방선거결과 이후에 치러질 선거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박은 많은 사람이 꿈꾼다. 그러나 대박은 꿈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에 상응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모두가 합심하여 공명선거의지를 다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대박을 넘어 ‘불 대박’을 안겨주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社說

시·도, 지방공기업 개혁 왜 미적거리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개혁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지자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는시는 최근 경영성과가 2년 연속 ‘라’ 등급 이하를 받거나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3단계 이상 하락하면 최고경영자를 해임토록 하고, 부채관리와 원가절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 역시 10개 공기업·출연기관과 ‘경영성과 계약’을 맺고, 고강도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 광주시는 산하 공사·공단 경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고,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도 지난해부터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이렇다 할 성과

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는 7개, 전남엔 22개의 지방공기업이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광주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9782억 원, 부채 비율 27.4%. 경영 평가 상 4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월 ‘지방공기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주는 2개, 전남은 6개 공기업이 재무상태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곳도 4개나 됐다.

공기업의 재정 악화는 수익성이 민간 부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도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주된 요인이다. ‘낙하산 인사’로 함량 미달인 경영진이 선임되는 것도 병폐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고스란히 주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 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형사고 주범 ‘샌드위치 패널’ 규제해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중에 약하고, 화재나 눈에 취약해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한 도내 화재 2480건 중 137건이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재로 사망한 30명 중 5명은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서 변을 당했다고 한다. 목조 건물이나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인명 피해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5월 광산구 평동산단 내 보온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건물 2개 동(약 2100㎡)이 전소돼 7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건물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진화 과정에서 물이 투과되지 못한 채 화를 키웠다. 샌드위치 패널은 두께 0.5mm 내외의

강판 사이에 목재나 스티로폼 등을 채워 접착제로 만든 특수 합판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단축돼 공장과 체육관 건축 등에 이를 소재로 쓰고 있다. 하지만 화재시 철판이 물결을 막고, 내부 자재의 열기가 방출되지 않아 진화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6월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내연(難燃) 기능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확인이 쉽지 않은 탓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건축법을 고치고, 소방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은 규모로 나눠 짓는 편법도 막아야 한다. 강판 두께도 높여야 하며, 패널 속에 스티로폼 등을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은 안 된다.

無 等 鼓

7080 세대들에게는 ‘워크맨’으로 인해 더욱 기억에 남아 있는 일본의 ‘소니’(SONY)는 한 때 일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자제품 생산기업이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소니 제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유한 집안 축에 들었다.

소니는 이후 CD플레이어나 미니디스크 플레이어, MP3플레이어로 옮겨가고 있을 때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소니는 애플의 아이팟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소니의 추락은 타사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배타성이

소니의 몰락

조직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기술교

류와 시장 흐름이라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 것이다. 기술과 제품력, 고객 충성도 등 모든 면에서 최고를 구가했던 ‘소니 왕국’이 체 15년이 되지 않아 몰락하는 모습을 보던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속에 존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무섭다. 크개는 국가, 작개는 기업 모두 흐름과 변화 속의

핵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 제품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바꾼 대표적 혁신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워크맨의 흥행은 소니에게 오히려

조직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기술교

류와 시장 흐름이라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 것이다. 기술과 제품력, 고객 충성도 등 모든 면에서 최고를 구가했던 ‘소니 왕국’이 체 15년이 되지 않아 몰락하는 모습을 보던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속에 존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무섭다. 크개는 국가, 작개는 기업 모두 흐름과 변화 속의 핵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 제품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바꾼 대표적 혁신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워크맨의 흥행은 소니에게 오히려

/최재호 시회부장 lion@kwangju.co.kr

목욕탕 CCTV 마구잡이 설치, 사생활 보호 걱정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목욕탕과 찜질방 같은 목욕시설 3곳 중 1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밝혀졌다. 이걸 웃어넘겨 할지 몰아 할지 헷갈리기만 하다.

요즘 택시 안에는 거의 다 CCTV가 설치돼 있다. 택시 승객이 강도도 돌볼할 수도 있고 각종 교통사고도 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

서 큰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택시를 타는 승객들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고, 이게 자칫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는 한다.

그저 앉아서 목적지에 가는 택시가 개인 신상노출을 우려할 정도인데, 웃 벗고 목욕하는 목욕탕과 찜질방 3곳 중 한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니 경악할 만 하다.

물론 벌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찍자는 것은 아닐 걸로 안다. 하지만 탈의실, 발한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니 믿이 다들 어찌 않는다. 목욕탕에서는 도둑이 많고, 탈의실에서 물건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안전예방 차원에서 그런다고 변명은 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개인의 중요한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범죄 예방 차원이나 교통 시설관리 등 진정한 의미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범

죄 방지는 물론 범죄자 체포에도 CCTV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은밀한 곳까지 CCTV가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업소 측은 고객들에게 그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으니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CCTV에 찍힌 여성들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유포되면 그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은 법적으로 막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 규제해야 옳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 화 1부 2200-661 문 화 2부 2200-651 여 론대부 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본부 2200-515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광고마케팅부 2200-551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독자서비스부 2200-551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세 울 지 사 02-773-9331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